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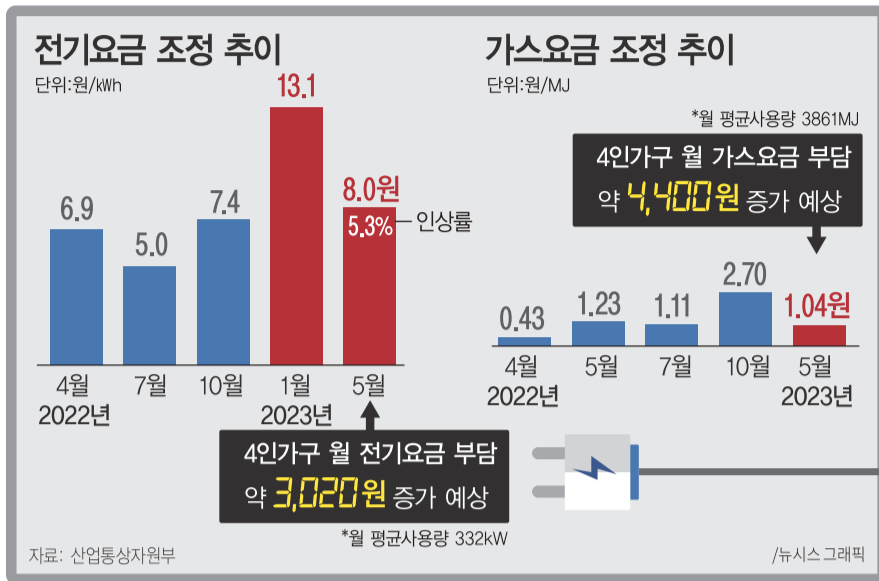
# 에너지공기업 겨우 숨통... 추가 인상·조정 '정치선택법' 관건

경영난 해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 내년 총선 앞두고... 향후 방향성 영향 경제계 "원가 기반 관리체계 필요"

정부가 장고 끝에 2분기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하기로 했으나, 한국전력 적자와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해소 등 에너지공기업 경영난 해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에너지요금 결정에 정치권이 관여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3분기 이후 추가적인 요금 인상 여부는 안갯속으로 빠져 든 형국이다.

15일 한전에 따르면,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지난 1월 요금조정 시 반영하지 못한 2022년 연료비 증가분 중 일부를 반영한 것이다. 한전은 2021년 이후 폭등한 국제연료가 등으로 지난해 사상 최대규모인 32조7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6조2000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이번 2분기 요금인상으로 전기판매 수입은 2조6606억원 증가하는데 그친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상반기 발생한 영업손실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수준이다. 국제 연료가격은 안정화 추세지만, 여전히 평년 대비 높은 수준이고, 국제 연료가격과 국내 도입가격간 반영시차 등이 있기 때문이다.

가스공사 또한 올해 1분기 요금 동결 이후 2분기 메가줄(MJ)당 1.04원 소폭 인상하면서 재정난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가스공사 민수용 미수금은 작년말 8조 6000억원에서 1분기에만 3조원이 더 늘어 11조6000억원에 이른다. 산업부는 당초 가스요금을 올해 MJ당 2.6원



씩 총 4차례에 걸쳐 올려야 가스공사의 경영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한전은 이에 전기요금 인상과 별도로 요금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기 위해 25조원 이상의 재정건전화계획, 자산 추가 매각 등 전력그룹 차원의 다각적인 고강도 자구안도 추진한다. 한전은 지난 12일 전직원이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고 알짜 부동산인 한전 남서울본부 매각 등 사실상 실현 가능한 모든 재무개선 자구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돼 온 요금 인상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면서 "국제 에너지시장이 안정화되더라도 국제 에너지가격과 국내 도입가격간 최대 6개월의 시차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상당기간 국제 에너지가격의 급등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추가적인 에너지가격 인상을 시

사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모두 추가적인 인상이 필요하지만, 3분기와 4분기 냉방과 난방 수요가 큰데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요금 인상이 여의치 않을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에너지공기업의

재무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안정적 전력 구매나 가스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공기업의 설비투자나 공사발주 축소 등에 따라 에너지산업 생태계도 취약해질 수 있다. 더욱이 에너지공기업들의 재무위기가 회사채시장 등 여타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경우 우리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산업부 이호현 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연내 추가 인상 계획을 예단하지 않고 있다"며 "국제 에너지 가격 동향,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경제계에서는 원가에 기반한 전기·가스요금 조정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한국전력의 적자 33조원과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11조원을 고려할 때 전기·가스요금 인

상은 불가피하다고 본다"면서도 "경제가 어렵고 수출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향후 추가적 요금 인상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단소중립, 에너지 수급 불안에 따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소비 절감이 중요한 만큼 요금 조정 외의 수요 관리, 에너지 시설 투자 확대 등 관련 정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은 인정하면서도 원가 정보 공개와 원가 기반 가격 체계 정착이 필요하다고 했다. 류성원 전경련 산업혁신팀장은 "근본적으로 원가에 기반한 전기요금 가격체계 정착이 시급하다"며 "용도별 원가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판매 시장에 경쟁을 도입해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상황 취약계층에는 인상분 경감”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 소상공인·뿌리기업 분할납부 실시 한전·가스공사 자구책 긍정적 평가

국민의힘과 정부가 당정협의회를 통해 2분기(4~6월)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하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며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대해 국민은 물론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장기간 지속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중고를 겪어온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워선

안 된다는 원칙을 견지하며 요금인상을 다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금인상 단가와 관련 급격한 인상 시 국민 부담이 과중될 수 있는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며 "취약계층 지원 대책과 여름철 냉방비 부담 완화 대책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분을 경감해 적용한다"며 "사회배려계층은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에너지바우처 발급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반 가구에 대해서는 "7월부터 전기요금 에너지캐시백 지급 기준을 확대하고, 누진 구간을 확대해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을 대상으로는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실시해 부담을 완화하고, 농어민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분을 3년간 3분의 1씩 분할해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내놓은 강도 높은 자구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직원 임금 문제 논의 과정 등을 지켜보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사람을 연결하고  
시간을 연결하고  
공간을 연결하는

**지금 이 순간도 LX는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마케팅·전략·데이터 LX 인터내셔널 | 글로벌 스마트 물류 LX 판토스 | 프리미엄 엔터테인먼트 LX 하우스 | 신소재 개발 LX MMA | 차세대 반도체 LX 세미콘

LINK FOR NEXT